

소사장(small businessmen)의 나라, 한국 —‘가족 개인’과 한국사회의 ‘무계급성’

김동춘

1. 문제 설정

40대 이상 한국의 중년 남성은 그의 직업과 신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장’으로 불린다. 옛날에는 낮모르는 중년 남성을 부를 때 ‘선생님’이 높임말로 사용되었지만 언제부턴가 사장이 선생님을 대신했다. ‘사장’은 한국인이 선망하는 지위이기 때문일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영업 중인 치킨 가게의 수는 약 3만 6000여 개로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 수 3만 5000여 개를 넘어섰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3만 6000여 명의 치킨집 ‘사장들’이 활동하는 셈인데, 그중 거의 절반은 3년 안에 문을 닫는다고 하니 한국의 ‘사장’은 사실상 빚 독촉과 파산의 위협에 시달리는 하루살이 목숨인 셈이다.

현재 한국은 임금노동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이고 생산의 서비스화, 정보화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진척되어 탈산업사회로 진입하였다. 그런데 고

용구조의 자본주의화, 즉 자본/노동으로의 계급분화가 크게 진척된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에서 자영업자(self-employed), 프리부르주아, 즉 소규모의 자본을 갖고서 남에게 고용되지 않은 채 한두 명의 종업원이나 자신과 가족의 노동에 의존하여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이들은 경제활동 인구에서의 비중도 크지만 임금노동자들이 대량으로 형성된 1980년대 후반 이후에도 지역사회나 지역정치에서 임노동자 집단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에서 프리부르주아로 불리는 이 집단은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양 계급 사이에 끼여 독자적인 위치와 역할을 갖지 못한 이중적·모순적·양면적·과도적·유동적 특징을 갖는 존재로 묘사된다.(Poulantzas 1974, 205; 드레이퍼 1986, 181-213; Steinmetz, George and E. O. Wright 1989) 특히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이들은 주로 경멸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주류 사회과학에서는 이들이 (구)중간계급 혹은 중간층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변혁의 관점에 선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물론, 이들을 중산층, 사회의 균형추라고 하면서 이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았던 주류 사회과학도 실제 이 집단의 존재나 활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Mayer, 197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마르크스 이론의 계급양극화론(프리부르주아 몰락론)과 달리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되어 임노동자의 비중이 크게 확대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자영업자 집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물론 때로는 감소 추세가 역전되기도 한다는 지적도 있다.(Bechhofer and Elliott 1985; Steinmetz and Wright 1989) 탈산업사회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사회의 진척, 다수 노동인구의 유동화 현상과 더

불어 새로운 직업 유형의 프리부르주아가 계속 만들어지기도 한다. 인구구성에서나 정치사회적 영향력에서 보더라도 프리부르주아가 과도적·잔여적 계급이라는 그동안의 통설은 새롭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

산업화 이후 한국은 전통적 자영업은 크게 축소됐으나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상승의 열망을 가진 도시 자영업자들이 대량으로 형성되었다.(Koo 1976) 이들의 비중은 1980년대 이후 경향적으로 축소되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도산과 대량해고 조치로 인한 실업 사태로 강요된 자영업자화로 인해 영세자영업자가 대량으로 창출되었다. 한편 노동시장 유연화 등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대량의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형성되었는데, 이 중에는 자본-임노동 체계의 외곽에서 활동하는 대량의 영세자영업자도 포함된다.¹⁾ 1997년 외환위기 직후 정부가 대량실업의 완충장치 마련을 위한 지원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이들 자영업자의 팽창이 두드러지기도 했다. 결국 2000년대 이후 경제활동 인구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그것이 생산이나 유통이 대자본에 집중됨으로써 대다수의 노동인구가 임노동자로 전화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

한국사회학에서 자영업자 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그리고 이론적 논의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구해근, 김병조, 최태룡, 김영모, 유경은 등은 계급론, 사회이동의 관점에서 이 집단을 분석한 적이 있고(Koo 1976; 김병조 1986; 최태룡 1991; 김영모 1991; 유경은 2001), 특히 구해근은 일찍이 '중간계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간계급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소위 기본계급

1)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precaious)'과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를 합성한 용어로, 불안정한 고용과 노동 상황에 놓인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실업자, 노숙인 등을 총칭한다.

이라 보는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 생각된다. 중간계급은 단순히 문화가치체계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나 사회복지제도 등 중요한 사회제도의 성격에도 막중한 영향을 준다.”(구해근 1991, 145)고 주장했다. 1997년 이후 국책연구기관이나 여러 연구자들이 자영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꾸준히 해왔으며, 영세자영업자들의 정책적 보호를 위한 제안을 해왔지만, 이들의 계급·계층론적인 성격과 의미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필자는 자영업자 혹은 프리부르주아의 경제적 비중의 증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이들의 정치·사회적 과대 대표성, 다시 말하면 그것에 의한 한국 정치사회의 ‘무계급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자본주의 산업화를 겪은 한국에서 전통적인 자영업자인 소농층은 급격히 감소했고 객관적으로 자본/노동의 양극화는 두드러졌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역사정치적 조건, 그리고 1950년 직전 농지개혁과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조건은 1990년대 이후의 계급구조화에 여전히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근대 이전의 중앙집권적인 국가와 과거시험을 통해 권력에 접근했던 유교적 관인(官人)사회의 전통과 영세농이 지배적인 전통사회의 생산구조 때문에 자영농, 소소유자 의식과 문화는 현대 한국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행사해왔다고 본다.

소소유자 문화의 영향력은 중앙집권적 국가의 전통과 재벌 대기업의 시장 장악, 그리고 한국식 가족주의와 깊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 세 조건은 모두 ‘계급 혹은 계층’의 사회적 응집을 차단·굴절시키고 모든 인구를 경쟁과 유동적 흐름에 몰아넣는 요인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중앙집권적 지배질서(헨더슨 2013)는 온 국민을 교육과 과거를

통한 지위상승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고, 재벌주도의 경제질서는 노동시장을 양극화하는 조건이 되었을 것이고, 가족주의는 사회적·계급적 응집을 가로질렀을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에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자영업자 혹은 프리부르주아는 계급, 계층론적으로 볼 때 과도적·잔여적 범주이기는커녕 한국사회에서 과거에는 물론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 집단으로 자리 잡고 있고, 정치적 역학관계에서도 경제활동인구의 압도적 다수자인 임노동자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경제적 비중도 높지만 문화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때 보통의 한국인들의 태도, 가치관, 의식은 물론 정치적 지배질서도 이들의 존재 및 의식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재벌 대기업이 독점하는 시장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경제활동인구, 특히 가족노동을 동원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존재는 ‘잔여’ 범주가 아니라, 한국 사회경제의 기층, 그리고 계급성이 탈각된 한국 정치사회의 기본특징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아닐까? 자영업자는 현대 한국사회의 특수성과 보편성, 특히 ‘한국 계급계층 질서의 특성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는 아닐까?(신광영 2004, 116)

이런 문제의식하에서 이 연구는 한국 영세 자영업자 집단이 비록 경제적으로는 평균적인 정규직 노동자 이하의 처지로 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사장’ 혹은 (프티) 부르주아의 성격을 매우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그들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 이상으로 사회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대표되어 한국사회의 보수화의 기본 축을 형성한다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2. 한국 자영업자의 규모와 성격

1) 생산관계에서의 자영업자

여기서 자영업자는 소규모 자본으로 단신, 가족 혹은 1~4인까지 고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독립 생활자, 소상공인 등을 주로 지칭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도소매업, 숙박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영세소농도 여기에 포함된다. 1960년대까지의 자영업자는 대부분 영세소농이었으나 이제 인구구성에서 이들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했다. 한편 학력자본이나 영리활동의 도구인 회소성 있는 자격증을 소지하고서 단신 혹은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전문직, 그리고 지식인 등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²⁾ 넓게는 비임금근로자이며, 자영업자는 단독 자영자와 4인 이하의 고용을 한 고용주를 주로 지칭한다.

자영업자(self-employed) = 고용주 + 자영자

2)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며, 비임금근로자는 유급의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광의의 자영업 개념으로 정의된다. 둘째, 자영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서는 소상공인을 소기업 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를 법인과 개인 사업자(일반, 간이, 면세 사업자)로 구분하여 후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기도 한다. 한편 주된 사회복지지원 대상이 되는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법'에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연간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간이/면세사업자로 정의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³⁾

외국에서는 주로 비임금근로자를 자영업자로 본다. 그래서 넓게 잡으면 자영업자는 비임금근로자를 말하며, 좁게 잡으면 소고용주(1인에서 4인까지)와 단순자영자를 포함한 것이다.⁴⁾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국적으로도 1인 자영업자의 비중이 70%를 넘고, 경기도의 경우 자영업자의 평균 고용인원은 1명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무급가족종사가 고용인원의 65%를 차지하고 있어서 한국 대다수의 자영업자는 주로 규모가 매우 영세한 가족생계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⁵⁾

자본주의적인 계급분화가 진척되면 전체 고용구조에서 이들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다. 한국에서도 1980년대 이후 이들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되었다.⁶⁾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직후나 2011년 이후 등 경제위기와 맞물려 이들의 비중이 다시 늘어났다. 대량의 실업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들의 비중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다가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1997년 이후 자영업자의 증대는 중소기업의 도산,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대량의 실직자 발생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즉 조직된 노

3) 다른 선진국에서는 고용주와 자영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계를 낸다. 그것은 대체로 이들이 임금근로자보다는 소득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4) 물론 여기에서도 애매한 범주가 있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가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통계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어서 노동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용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5) 201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경기도 자영업의 실상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자영업의 80%가 생계유지형이라고 한다.

6)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 자영업자의 반 이상은 농업 종사자였다. 당시 자영업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40% 정도를 차지했다.(김영모 1991, 6)

동시장에서 흡수할 수 없는 노동인력이 강제로 자영업으로 몰리는 것이다.(금재호 외 2006)

2015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는 546만 3000명으로, 1년 전(551만 2000명)과 비교해 4만 9000명 줄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8.2%로 OECD 평균 15.8%를 크게 웃돌고 있다. 그리스, 터키,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는데, 대체로 일본의 두 배 이상, 미국의 네 배 이상을 기록한다. GDP 대비 사업체 수에서도 한국이 OECD 1위인데, 이는 자영업자 수가 많기 때문이다. 산업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도·소매업 사업체 수는 일본 11.0개, 미국 4.7개, 영국 7.8개, 독일 9.3개인 데 비해 한국은 18.8개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1~9명 규모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수는 605만 3143명에 달했다.(연합뉴스, 2015. 8. 11) 한국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분명하나, 이것은 노동시장의 결합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Bohenhold and Staber 1991)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를 종합해보면 한국은 경제규모, 경제발전 단계 등에 비추어 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임에 분명하다.⁷⁾

그런데 자영업자 중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처럼 노동자성이 강한 사람들도 있고, 소득액을 기준으로 보면 부르주아에 가까운 사람도 있다. 특히 50대 이상의 육체노동자 출신 자영업자들은 경제적으로는 임금노동자보다 수입이 낮다. 소득분포에서 볼 때 자영업자의 최

7) 경기변동, 실업률, 노동시장 구조가 자영업자의 증감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나, 한국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이렇게 높은 이유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나 이론은 아직 거의 없다.

하층은 극히 영세한 소상공인 등이고, 최상층은 사실상 자본가화한 전문직 자영업자(개업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다. 최상층의 전문직 자영업자는 계층적으로는 중산층 혹은 부르주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영세자영업자는 경제적으로는 하층에 속한다.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도 극히 낮아 이들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결국 사회경제적으로 자영업자는 매우 불안한 존재다.(윤도현 2014)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될 수 없어서 자영업자(생계형 자영업자)가 된 경우이며, 서로 간에 극심한 경쟁 상태이며 경제위기의 완충제 역할을 한다.

이들 영세자영업자는 생산수단의 소유자, 고용주라기보다는 채무자이자 건물 임차인들인 경우가 많다. 최근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특히 주택담보의 상당수, 제2금융권 대출도 모두 이들 자영업자의 빚 갚기에 쓰이고 있다. 한편 이들은 건물이나 상가를 임차하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거의 예속되어 있다. 즉 채무자이고, 임차인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임노동자와는 다른 이유로 종속적인 존재다.

8) 자영업 중에선 음식점이 80.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 자영업자 중 55%는 5년 내에 사업을 접는다. 특히 노래방(54.4%), 비디오방(51.5%), 출판·인쇄업(33.9%), 게임·오락업(20.4%)의 5년 생존율은 전체 평균에 미달했다. 서울 지역에선 음식점의 5년 생존율이 51.6%로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수준이었고, 광주(48.6%)와 함께 최하위권이었다.([조선일보], 2015. 10. 26)

2) 계급적 위치

자영업자는 고용관계에서 정의된 개념이지만, 계급·계층의 관점에서 프티부르주아, 구 중간계급 혹은 중간층으로 불린다. 마르크스에게 프티부르주아는 자본주의 이전의 생산양식을 대표하는 계급이거나, 소규모 생산수단의 소유와 자가 고용을 결합하고 있는 존재, 혹은 자본/노동관계의 과도적·잔여적인 범주로 묘사된다. 폴란차스는 프티부르주아를, 소상공인을 주로 지칭하는 구 프티부르주아와 자본의 기능을 대신하면서 비생산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기술자나 관리자 등을 주로 지칭하는 신프티부르주아로 구분하였다.(Poulantzas 1975) 라이트(Wright)는 이들을 ‘중간계급’의 범주에 집어넣으면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 모순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계급이라고 보았다. 생산관계에서의 위치 혹은 정치사회적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한 프티부르주아는 자영업자, 즉 소상공인을 포함한 피고용관계에 있는 기술자, 관리자까지 포함한다.

즉 프티부르주아는 어느 정도의 생산수단의 소유, 독립성과 독자 기술, 가족노동 혹은 한두 명의 고용노동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자본/노동의 어느 편에도 일방적으로 속해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갖는다. 결국 프티부르주아 혹은 자영업자는 독자적 ‘계급’이라기보다는 ‘계층’이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그래서 이들을 단일 집단 혹은 사회계급으로 묶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들 자신도 스스로를 계급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계층’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최태룡 1991) 그런데 이들을 중간계급, 중간층이라고 본다면 경제수준이 중간 정도 되는 집단, 직업이 안정되어 있고 소득이 높은 집단이라는 말인데, 통상의 임금노동자들은 자영업자가 되는 것을 일종의 계층상승으로 보는 경향이 있

고, 실제로도 자영업자들의 직업만족도는 임노동자에 비해 높지만(이승렬 외 2007, 67-68), 실제 오늘날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그런 경제적 지위와 안정감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중산층, 중간층론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처럼 ‘구 중간계급’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들이 사회의 균형추 역할을 하거나, 경기변동의 완충제 역할을 하면서 사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지도 의문이다.

사회학에서 자영업자를 주로 지칭하는 구 중간계급, 즉 프티부르주아와 전문 기술직 노동자, 화이트칼라를 주로 지칭하는 신중간계급은 자본/노동 두 계급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확실히 속하지 않고, 또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유동적인 존재 혹은 양쪽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는 이중적인 존재로 본다. 자영업자, 프티부르주아는 소유자, 고용주의 성격과 임노동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의식, 계급행동에서 이중성을 보인다. 그들은 대자본으로부터 수탈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기 때문에 기존 질서에 대해 극히 비판적이기도 하지만, 개인주의적이고 성취지향적이며 노동자들의 연대나 집합적 저항에 부정적이다. 그들은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계급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혁명의 시기에는 보수세력의 편에 서기도 했다.”(드레이퍼 1986)

자영업자는 과거에는 토지, 오늘날에는 소규모의 재산을 소유하고서 그것을 이용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영리활동을 한다. 그런데 종업원 4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임노동자 이상의 강도와 노동시간을 자신의 일에 투여하기도 한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는 이윤과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한두 명의 종업원 혹은 가족 노동력을 활용할 경우 이들은 통상의 자본가들보다 더 심한 착취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업원과 가족구성원 간에는 통상적인 사용자-피고용자/자본-노동관계가 성립되기 어렵다. 즉 영업을 위한 가족 유대가 자본주의적인 이해관계에 앞선다. 그래서 이들은 공동운명체인 ‘가족 개인’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들의 과중한 초과 노동은 일종의 자기착취, 가족착취인 셈이다.

거의 빈민화한 하층자영업자들은 기존의 정치경제질서에 매우 비판적이지만 역설적으로 그들 간의 연대의식은 거의 없다. 이들 자영업자는 개인적인 계층 상승과 성공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고 있으며, 임노동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노조활동 등 집합주의적인 권리증진 노력에 대해 자신들보다 소득이나 사회적 위세가 높은 화이트칼라보다도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⁹⁾ 폼(Form)은 미국의 육체노동 프티부르주아의 계급적 성격 역시 매우 유동적이고 다양하다고 보면서도 조직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Form 1982) 그래서 이들 하층 프티부르주아는 과거 히틀러하의 독일에서처럼 대자본에 의해 위협을 당해 불안한 상태에 있고 몰락의 위기에 몰릴 때 파시즘을 지지하기도 했다.¹⁰⁾

자영업자들이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이유는 폴란차스가 말했듯이 생산영역이 아닌 정치·이데올로기 차원에서 규정된 이들의 ‘계급 위치’가 이들의 경제적 조건에서 유래한 의식과 실천을 압도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나 미디어가 조직적으로 선전,

9) 노동쟁의가 발생할 경우 자영업자들은 노동자 입장보다는 회사의 편에 더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최태룡 1991, 150) 그리고 토지의 공유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신성불가침의 원리(32%), 원칙적으로 사유이나 제한 가능하다는 입장(31.6%)이 다수를 차지한다.

10) 홍두승 외(1993); 라이히(2006) 참조.

유포하는 성취주의와 개인 책임주의, 그리고 모든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과 노조활동에 대한 적대적 태도들이 여과 없이 이들에게 수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 자영업자는 조직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극심한 경쟁 상태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담론이나 미디어의 선전에 노출되어 있다. 물론, 그리고 소고용주로서 피고용자를 거느리는 이들의 처지, 성공과 계층상승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는 사실도 그러한 태도를 갖게 만드는 물질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3. 한국 자영업자의 정치사회적 비중

1) 유교적 관인(官人)사회의 전통과 ‘가족 개인’의 투쟁

미야지마 히로시(宮島博士)는 “한국에는 세습 신분제가 존재한 적이 없다. 능력을 본위로 한 개방적인 인재등용책인 과거제의 본질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조선에 있어서도 지켜졌다.”고 강조한다.(미야지마 2013, 161) 그는 16세기 이후 조선에서 “세습 토지구족이 존재하지 않고, 토지가 지위와 부의 원천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대 이전의 유럽과 매우 상이하다.”고 강조하면서 “장인 혹은 직업집단의 전통이 거의 미약하고, 과거시험 합격을 통해 관인의 ‘자격증’을 갖게 되면 권력과 토지(경제적 부)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열정은 오직 과거시험으로 집중되었다.”고 보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조선은 신분사회이기는 했지만 토지 상속이라는 세습의 원리보다는 능력을 통한 지위 이동의 원리가 작동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결국 중앙집권적

인 국가와 관료제도, 과거시험을 통한 인재등용은 부와 권력을 배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미야지마는 소농 생산체제를 전근대 조선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본다. 소농사회라는 것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리거나 간에 기본적으로 자신과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는 소농의 존재가 지배적인 농업사회를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정의한다.(미야지마 2013, 49) 그는 유럽이나 일본에서 존재했던 봉건제가 조선에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영농 생산이 농업생산의 기본 형태였다면, 자영농의 소소유자 의식이 매우 강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고 본다.

물론 미야지마의 소농론은 봉건제의 결여/자주적 근대화 맹아의 부재라는 일본인들의 식민사관과 통하는 점도 있다. 세습 노비가 인구의 30% 내외를 차지했던 조선에서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자족적인 근대적 형태의 소농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다.¹¹⁾ 실제로는 자작농, 소작농, 영세소농 등 다양한 층이 존재했을 것이고, 이들이 양반지주의 지배로부터 독립해 있었던 자유로운 존재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세습 대지주가 존재하지 않았고, 몰락한 양반 영세농이 있었지만, 이들이 조선 생산체제의 핵심을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유교적 관인사회의 전통, 중앙집권적인 국가권력, 세습보다는 시험을 통한 관직 획득은 조선의 권력과 부의 분배체계를

11) 주종환(2006)은 조선 말의 농민들은 하급소유권(경작권)을 갖고 있었으나 상급소유권(소유권)은 갖지 못했다고 본다. 동학농민들의 저항은 바로 상급소유권을 갖기 위한 투쟁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의 소농이 경작 규모가 적다는 점에서는 소농이 맞지만 영국식의 독립자영농은 아니었기 때문에 반봉건적인 지배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라고 보았다.

구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야지마의 조선사회 이론은 ‘소농’의 보편성 보다는 ‘세습 영주의 부재’에 강조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제적으로는 영세농인 양반들은 과거를 통한 지위 획득에 사활을 걸었고, 소작인들은 경작권을 확보하거나 자신의 토지를 갖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 근대화의 동력, 즉 ‘가족 개인’을 단위로 한 지위상승의 열망의 물질 기반이 된다.¹²⁾

근대 유럽에서는 봉건질서의 붕괴 과정에서 농촌의 독립자영농, 그리고 도시에서 소상공인이 광범위하게 생겨났고, 미국에서는 자영농민이 소소유자의 주축을 형성했다. 서유럽에서 근대 부르주아 혁명은 대자본가에 의해 소농, 소상공인의 몰락을 재촉했지만, 광대한 토지를 자랑한 미국에서 이들 자영농민은 정치사회의 주축으로 남았다.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 즉 미국식 계급이동성의 문화적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조선 말기 개혁 요구 혹은 ‘민란’은 상업, 산업 부르주아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수탈을 반대하면서 안정적인 경작권 혹은 소유권을 갖기를 원하던 노작농, 영세자영농이 주도했다. 일제 식민지 기간의 소작쟁의 역시 그 연장에 있다.

결국 조선 후기 이후 한국에서는 자영농의 상승 열망이 근대화의 내재적인 동력이 되었다. 결국 1949년 농지개혁으로 지주-소작관계가 철폐되면서, 대다수의 인구는 자영소농으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12) 이 점에서 그는 동아시아에서의 근대는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 이전에 이미 형성되었다고 본다. 한국에서 양반은 세습귀족이 아니라는 점, 신분이동이 유동적이었던 점, 개인주의는 서구화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나타났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그런데 그의 주장에 대해서 아직 한국의 사회계에서는 본격적인 비판이나 긍정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학자들과의 대화는 미야지마 외(2011) 참조.

농촌에서의 기업형 농업, 부르주아 발전이 억제되고, 곧이은 도시화와 더불어 이들 하층 자영농민은 도시의 빈민, 도시의 중소상인으로 편입되었다. 농지개혁으로 모든 인구가 자영농으로 재편되는 과정과 교육열의 팽창은 같은 현상의 다른 면이다. 그것은 '가족 개인'의 지위 상승 열망의 폭발이었다.(김동춘 2000)

결국 분단, 한국전쟁 전후 전면적인 농지개혁으로 인해 한국 농촌 사회가 영세소농 질서로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교육기회의 개방과 확대로 모든 한국인들은 가족단위의 상승의 열망을 가질 수 있었다. 여기에서 학력자본으로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다수의 엘리트층을 포함하면 해방 후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의 압도적 다수는 상승지향의 프티부르주아 의식에 지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사회적 관계망—'가족 개인'과 지역정치

유교적 가족주의(familism)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한국사회에서 한국인들은 주로 '가족 개인'으로 행동한다. 결혼 시에 가장 두드러지지만, 개인의 선택에는 개인의 자유의사보다는 (확대)가족의 판단이 주로 작용해왔고, 개인이 가족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 한국의 계급·계층연구에서도 가족은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족과 계급·계층관계가 어떻게 연결 혹은 교차·굴절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³⁾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친족질서의 지속적 영향력과 더불어, 식민지 근대화 이후 강화·재구축된 가족주의는 산업화 이후 구성원의

13) 가족과 계급을 연관시킨 신광영 외 연구(1994)가 매우 드문 예다.

새로운 직업획득 과정에서 강한 전략 단위로 기능해왔다. 한국인들은 개인단위의 성취전략이 아닌 가족단위의 상승과 이동을 기획했다. 여기서 노동자 혹은 화이트칼라의 직업을 갖는 것 모두 가족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고, 직업의식, 계급의식은 그의 행동을 좌우하는데 부차적인 영향만 미쳤다.

한국인들이 대부분이 소농이었던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를 겪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가족, 즉 4촌 이내의 친가나 외가를 포함한 확대가족, 조부까지의 3대 가족 내에 임노동자와 자영업자, 심지어는 자본가와 임노동자가 동시에 생겨난 예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임금노동자가 대량으로 형성되지만 부모나 조부모가 소농 혹은 소상인이었을 경우, 그리고 친족 구성원이 프티부르주아일 경우 이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망 속에서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임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기는 매우 어렵다.

즉 산업화의 역사가 짧을뿐더러 가족주의·연고주의가 개인의 정체성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에서 가족관계는 직업적·계급적 정체성을 가로지르는 변수로 작용했다. 기존 조사에 의하면 친족관계의 정도는 계급의식, 계급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신광영 외 1994) 즉 압축산업화를 겪는 동안 한국인들은 도시민이 되었고, 한 세대 안에 자본가, 노동자, 자영자로 분화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도시에서의 관계는 여전히 가족과 지역연고 중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족, 친족, 연고 네트워크가 여전히 이들의 정신세계를 크게 지배했다. 그래서 부자나 권력자, 특히 사업가의 성공 모델을 최상위의 이상으로 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원자화된 가족 구성원으로서 스스로의 존재를 자리매김한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는 오직 가족, 친족공동체였고,¹⁴⁾ 그들의 이상

은 가족, 친족 구성원의 일인이 권력자와 사업가가 되어 가족과 친족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것이었다.

그런데 가족 개인으로서 유대가 가장 확실하게 요청되는 것이 자영업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은 부부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 노동력의 동원 없이는 지속하기 어렵다. 가족은 가장 중요한 재산소유의 단위가자 생산의 단위다. 기존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들은 임금노동자, 봉급생활자에 비해 훨씬 더 넓은 사회적 관계망, 즉 친분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직계가족의 수가 임금, 봉급생활자에 비해 많다고 한다. 이들은 동창회 등 전통적 친분관계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맺고 있다.(이성균 2006) 이것은 자영업자가 사회관계망의 형성에서 한국인들의 통상의 네트워크, 즉 가족주의의 전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 된다. 즉 목돈이 필요할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친족과 친척 등 혈연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가족, 친족집단 내의 혈연적 유대는 국가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 가족주의 문화가 강한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도 조직 부분의 낮은 고용 흡수력이라는 경제 변수 외에도 이런 사회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¹⁴⁾

그런데 서비스 자영업의 고객은 마을 혹은 근린사회다. 자영업은 대체로 도시의 근린지역을 시장권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가장 긴밀하게 결합된 집단이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에게 근린 지역에서의

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거주지와 일터, 즉 영리활동을 하는 공간이 일치한다. 그래서 이들은 지역의 경제 상태, 지역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층자영업자들이 실제 인구 이상으로 지역사회, 더 나아가 전국단위의 여론형성이나 정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¹⁶⁾ 즉 지역정치와 연결되어 있는 상층자영업자는 지역사회에서 그 수적 비중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흔히 지역 여론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말도 하는데, 그것은 자영업자인 택시 운전기사가 지역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다수자를 대표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상층자영업자는 그 수적인 비중 이상으로 정치사회를 대표하고 있다. 특히 의원 선출 시 지역대표가 대다수이고 비례대표의 비중이 낮은 한국의 선거제도하에서 정치는 사실상 '자영업자 정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김대호 2008) 정상호의 조사에 의하면 민주화 이전에는 이들은 주로 국가의 최말단 직원 혹은 그들과 연결된 이익집단의 일원으로서 활동해왔고, 민주화 이후에는 각종 관변단체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정상호 2001) 이들은 3대 관변단체, 즉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자유총연맹의 회원 및 지역 지부 간부들 중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새마을 지도자의 경우 행정기관의 추천을 통해 지역의 중상층 자영업자들이 주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들이 관변단체의 임원으로 적극 참여하는 이유는 이들이 지역사회에 많은 관계

14) 혈연집단의 단위로서의 성관집단보다는 하위의 단위인 문중이라고 하는 단위가 훨씬 강한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미야지마 2013, 165)

15) 대체로 1인당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자영업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이탈리아와 더불어 한국에서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은 가족주의 문화와 관계가 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 역시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더 논의해볼 주제다.

16) 이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지역사회의 문제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 그것은 지역사회가 자신의 시장이기 때문일 것이다.(공보처 2002)

망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이해관심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들은 지역 언론 장악, 지역 의회 진출, 지자체의 각종 자문기구 참여 등을 통해서 임노동자 등 다른 집단의 참여를 차단하고, 지역의 권력구조를 보수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가진 거의 유일한 민간 조직은 교회다. 따라서 이들 자영업자는 영업을 위한 네트워크, 영리를 위한 동기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 즉 자영업자의 영업 관심과 교회 참석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것은 주로 자영업자로 구성된 미국 한인사회에서 교회가 지역주민센터의 역할을 하고, 기독교 교인의 수가 국내의 그것을 월등하게 상회하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도시의 교회는 가족, 연고집단을 대신하였다. 농촌사회의 영세자영농 출신의 50대 이상의 한국인들은 도시에서 새 연고를 찾았다. 결국 한국 사회의 친족관계, 가족주의가 노동자들의 수평적인 응집성, 계급적인 유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노동계급 정체성이 확장되지 못하는 만큼 그 사회적 공간은 프티부르주아의 의식이 압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 자영업자는 자본-노동 사이에서 이중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사실상 국가 혹은 대자본의 이데올로기나 입지를 강화하는 하위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산업구조는 재벌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으로 이원화되었고, 재벌 대기업 입사와 고위직 승진은 한국인들의 가장 중요한 성공 모델이었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에게는 우선 노동자의 지위를 탈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 어떤 직업을 갖는가보다 어떤 기업에 들어가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가족, 친족과 함께 직업·계급 내부의 응집성을 가로막는 칸막이는 바로 기업 간의 칸막이, 그리고 재벌체제다. 결국 임노동자의 처

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노동자로서의 동질성보다는 대기업, 재벌기업/중소기업 간의 칸막이가 그들의 지위와 정체성에 더 결정적으로 작용한다.¹⁷⁾ 전문직 자영인, 상층자영인의 경우 재벌기업의 경력, 재벌기업과의 네트워크가 그의 사업적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물론 국가 관료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이력, 즉 힘 있는 정부 부서 구성원과의 인맥이 사업적 성공을 좌우할 것이고, 이후 재취업에도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느 경우든지 스스로의 자본력과 소속 직업집단의 유대보다는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관과 유력자, 그리고 전국적인 재벌 대기업과의 인적인 연계가 사업성공에 더욱 중요한 조건이었다.

3) '무계급 사회'에서의 자영업자: 보수성과 저항

1인 자영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에서 자영업자 중 계급적으로는 부르주아, 계층적으로는 상류 층에 속한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프롤레타리아의 성격을 갖는가, 혹은 프티부르주아의 성격을 갖는가 사회 전체의 계급구조와 정치적 지배질서, 문화적 재생산 구조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⁸⁾

17) 재벌 대기업 소속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 간에는 매우 실질적이고 심대한 칸막이가 존재한다. 한국 노동자들에게는 그들의 직종, 임금수준보다 어느 회사에 다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역시 주로 전자의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다.

18) 하층자영업자의 경우 중간층, 중간계급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프티부르주아라고 부를 정도로 개인주의 문화를 내면화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김영모도 이들을 소산층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김영모 1991, 13)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자영업자는 가족, 연고 집단, 지역사회라는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관계망과 유대관계 내에서 경제, 사회활동을 하는 한국인의 전형이다. 한국인들의 사회관계에서 '가족'이나 연고 네트워크의 비중이 큰 만큼, '사업가로서 성공'을 열망하는 태도는 그들이 종사하는 직업영역에의 자부심이나 대자본의 시장 장악 시도 앞에 힘없이 몰락하게 되는 그들의 열악하고 불안한 경제적 처지에서 나오는 집합적 운명체로서의 연대감을 차단하고, 그들의 개별적 생존전략에 큰 영향을 행사한다.

한국의 거의 모든 사회조사에서 거의 예외 없이 자영업자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드러내왔다. 이들은 자신을 '소유자'의 일원으로 간주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지지하고 노조 및 노동운동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2003년 당시 한국갤럽의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영업자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51.7%), 2012년 18대 총선에서도 자영업자들은 그 이전 선거에 비해 집권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정도가 높았다.(전병유 외 2014)¹⁹⁾ 2014년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자영업자가 가장 높았다.(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22) 그런데 앞의 노동운동에 대한 태도 역시 비판적이라고 보는 사람의 비중도 자영업자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93.2%)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장 비판적이었다.(36.2%)²⁰⁾ 그런데 앞의 한국갤럽 조사에

19) 물론 이 조사는 주로 소득에 따른 투표성향 조사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정치성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영업자는 대체로 저소득층과 유사한 투표행태를 보인다.

20) 2003년 4월 말 『조선일보』의 의뢰에 따라 한국갤럽이 전국의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유팔무 외 2005)

서 외환위기 이후 경제사정이 나빠졌다고 보는 사람의 비율도 자영업자 집단이 그 어떤 집단보다 높았다. 즉 자영업자들의 다수는 대자본의 골목시장 지배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2009년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나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조사자의 8.5%에 불과하고, “있다면 어느 정당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약 40%가 한나라당이라고 답했다. 자신의 정치성향에 대해서는 중도라고 답한 사람이 약 40% 정도이고, 보수가 약 35%, 진보가 약 25%에 해당되었다.(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2010) 물론 응답한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40대 이상이므로 이들의 보수성은 직업 효과 보다는 연령 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 2014년 민주정책연구원의 직업별 지지정당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 중 새누리당 지지자는 41.6%로서 당시 야당인 새정연 지지자 24.8%보다 월등히 높았다.(민주정책연구원 2014)

이들 지역사회에서의 중상층자영업자들은 여러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지역 국회의원의 당선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결과적으로 보수적인 여당의 지속적인 지배, 더 나아가 국가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들 지역사회의 중상층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역정치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서, 그것이 자영업자 전반의 조직적인 이익대변, 정책참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앞의 조사에서 본 것처럼 압도적 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변한다.

마르크스가 강조한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대자본에 맞서서 그들의 고유한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지도 못하고, 그들 간의 연대에도 매

우 소극적이며, 극심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의식과 실천은 경제적 이익충돌이나 계급분화가 사회정치적 세력화, 나아가 정치적 균열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준다. 우선 지역의 중상층자영업자들은 직업적 유대와 단결력에 기초해서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권력기관과의 사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동원한다. 반면에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 역시 독자적인 이해 결집과 연대에 기초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세력화를 꾀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²¹⁾ 그러나 사회적 지향이나 정치적 태도에서 영세자영업자들도 중상층자영업자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 이들은 노조 활동 진보 세력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가족 연고에 의지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으며,²²⁾ 사회이동에 대한 열망, 성취지향과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 등을 갖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건물주의 횡포, 카드회사의 할인을 문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는 임대료 상승, 그리고 국가의 일방적 재개발 정책 탓에 권리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처음으로 조직적인 행동을 시작했고, 여러 지역에서의 대형슈퍼(SSM) 입점 반대운동 등으로 나타났다.

결국 영세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비슷한 처지의 같은 자영업자들이나 비정규 노동자들과의 연대의식은 물론 자신과 대립점에 있는 대자본과 유사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계급' 현상이 고도로 발전된 자본주의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지속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21) 2014년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발의한 이낙연 후보를 지지선언한 경우도 있었다.

22) 이들은 개인주의적이기는 하나 방어적 개인주의, 가족개체주의 지향을 갖는다. 개인주의의 다양한 양상, 개체주의와 개인주의의 관계 등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무계급성, 원자화된 '대중사회'의 현상은 자본주의 이전의 전통과도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일찍이 비트포겔(Wittfogel)이 말한 것처럼, 동양적 전제주의하의 소농들은 원자와 같은 존재들이었다.²³⁾ 이들 간에서는 수평적·계급적 응집성이 약하다. 그래서 국가와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수직 상승을 통해 자신의 권력과 부를 획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억압적 국가가 전통적 전제군주 국가를 대신함으로써 이러한 전통은 변형·연장되었다. 그래서 신분제가 철폐된 한국에서 대다수의 인구는 원자화된 '가족 개인'으로 존재했다. 이것이 헨더슨이 말한 '대중사회'의 현상이기도 하다. 물론 한국식 대중사회는 미국식 대중사회와 성격이 다른 형태의 국가에 의해 사회집단 간의 응집이 폭력적으로 해체된 무계급사회다.

4. 프티부르주아 문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1) 1997년 외환위기 이전

1960년대 이후 영세소농, 도시빈민, 육체노동자의 처지에 있었던 한국인들의 꿈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서 화이트칼라나 전문직 종사자로 만들거나, 중간층, 그리고 '사장', 즉 성공한 자영업자

23) 물론 사유재산의 개념이 발달하지 못했다는 비트포겔의 지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비트포겔 1991) 한국의 전통사회를 수렵사회로 보는 비트포겔의 이론도 적절치 않다. 박병호(1985)는 조선조에서 소유관념은 확고하게 정착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주종환(2008)은 박병호의 주장은 거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즉 하급소유권을 가진 농민들이 상급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한국인들이 꿈꾼 계층상승의 두 경로였다.(Koo 1976) 그들에게 중간계급인 사무원이나 전문직, 그리고 자영업자는 지위의 상승을 의미했다. 그리고 학벌이라는 문화자본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비록 수입은 좀 모자라더라도 임금노동자보다는 독립성과 자유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자영업자가 되기를 원했다. 노동을 천시하는 문화적 전통과 노동운동을 좌익시하는 반공주의 정치문화하에서 노동자는 모두가 피하고 싶은 직업 혹은 신분이었으며, '사장'으로 가는 과도적 위치에 불과했다.

그래서 고도성장기였던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농민은 물론 노동자들도 기회균등의 의식, 성취주의 지향이 매우 강했다. 한국의 경우 최근까지도 객관적으로는 노동자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중 60% 이상이 자신은 중간층,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83%(하층노동자 41%, 상층노동자 42%)가 중간계급이라고 생각했다.(Kunio 1966, 545) 그래서 압축성장을 겪었던 일본이나 한국에서 급격한 사회이동이 실제로 일어났고, 중산층화된 임금노동자 화이트칼라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노동자로서의 자각이나 정체성은 거의 갖지 않았고 지속적인 상승의 기대를 갖는 프티부르주아 의식이 사회적으로 지배적이었다.

한국의 경우 자신의 과거, 그리고 그들의 지향하는 목표 등 모든 점에서 임금노동자들의 정신세계는 프티부르주아 의식에 지배되고 있다. 현재 40대 이상 육체노동자의 대다수 부모들은 원래 소농 혹은 자영업자들이었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자들의 계급문화도 발육부전 상태이며 소소유자 문화에 의해 압도되고 있다. 1990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²⁴⁾ 1991년 본 연구자의 조사(1995)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

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된 후에도 임금노동자로 되돌아가려는 사람은 드물었다. 1990년대 초 최태룡의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가 된 동기는 기술이 없어서 26.8%, 독립성 24.9% 등을 들고 있으나 노동자 출신의 31%는 '독립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압도적 다수(90%)가 자영업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최태룡 1991, 100) 이는 종속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자신의 사업을 경영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1990년대까지 한국 노동자들에게 매우 강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한 세대 만에 후발국에서 거의 선진자본주의의 문턱에 도달한 한국에서 임금노동자 중 조부 때부터 임금노동자였던 사람은 거의 없다. 한편 한국의 자본주의 산업화가 식민지적 행정기구의 완비 이후에 일어났으며,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식민지, 후발산업화의 특성 때문에 행정도시가 산업도시에 앞서 형성되었고, 그래서 도시 중간층이 부분적으로 형성된 다음 산업화에 따라 임금노동자층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출발부터 중간층의 이데올로기 영향 아래에 있었다. 청소년 시절, 즉 불과 한 세대 이전까지 이들은 영세소농의 가정에서 자랐으며, 부친의 직업도 대체로 자영농민이거나 도시 반프롤레타리아였다. 따라서 이들이 객관적으로 임금노동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프티부르주아의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자영농-임노동자-자영업자의 이동경로를 거쳤기 때문에 노동시장 내에서 애초부터 안정된 지위나 직업의식, 그리고 사회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한국의 재별구조는 직종별·직업별 숙련 형성이나 직업의식 형성의 가능

24) 1990년 당시에도 생산직의 48.6%, 사무직의 49%가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장사나 사업을 하고 싶다(한국노동연구원, 1990)고 말했다.

성을 차단한다. 그래서 자영업자로 몰린 과거의 임노동자 역시 노동자 의식도, 자영업자 의식도 불분명하거나 오히려 더 강한 자영업자 의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²⁵⁾

현재의 50대 이상 제조업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자영농인 부모를 둔 사람이고, 그들의 정신세계는 자영농 의식, 자영자 의식에 지배되고 있다. 과거의 자영농 의식이 근대화, 도시화, 산업화와 더불어 자영업자 의식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훨씬 성취지향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현대그룹을 일으킨 정주영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는 부지런한 농부인 부친 밑에서 부지런한 농부로서 일생을 마칠 수 없어서 탈출하였으나, 자영업자에서 만족하지 않고 기업가가 되었다.

이것은 독립 자영농민이 민주주의, 반공주의에 크게 영향을 준 미국과 비교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천착해볼 주제다. 유럽식 봉건주의와 직인들의 전통이 있는 일본에서는 기술자들의 직업적 응집성과 직업 의식은 강하지만, 관인사회의 전통과 유교적 신분질서가 더 강했던 한국에서는 직인들의 직업의식과 응집성도 약하고 그것이 오늘까지 연결된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과 경로는 다르지만 한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프티부르주아 의식이 정치사회를 압도한다.²⁶⁾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계층의식이 '하'에 속한다는 사람들이 능력주의를 더 지지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²⁷⁾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문화가 하층민들에게까지 침투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즉 자영농의 전통과 현재

25) 재벌기업 소속 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 간에는 실질적인 칸막이가 존재한다. (장상수 2003)

26) Steinmetz and Wright(1989)는 자영업자가 미국의 문화와 사회의 구성에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자수성가의 신화와 아메리칸 드림이 그것일 것이다.

27) '상'에 속한 사람은 58.4%, 중은 60.0%이지만, 자신이 '하'에 속한다고 대답한 사람의 66.7%가 능력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三浦展, 2005)

노동자들의 소소유자 의식의 형성에는 국가, 교육제도, 자본주의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매개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과거에 노동계급형성의 굴절, 좌절에 대해 한국의 억압적 정치체제, 형성기(1987년 대투쟁)의 선택, 기업별 노조의 자기재생산 메커니즘의 정착 등으로 노동자의 계급형성의 때 이른 좌초를 설명하였다.(김동춘 1995) 그러나 상황이 유동적이던 당시의 시점에서 본 연구자가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던 점은 가족주의, 식민지 시기 이후 자영농의 열망, 교육과 학력자본을 통한 관직 획득과 지위상승 열망, 그리고 그와 관련된 소소유자 의식의 지속적 영향이다. 한국의 경우 산업화, 노동계급 형성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식민지 시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에 이미 시험을 통한 권력과 부의 기회가 어느 정도 열려 있었고, 산업화 이전에 보통선거권이 도입되어 국민들이 개인 '유권자'로 호명되었다. 농지개혁 직후인 1950년대는 거의 모든 인구가 영세자영농으로 재편된 한국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평등사회였다. 이러한 자영농 보편화, 교육기회 보편화의 시대가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노동자 집단의 등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한국이 프티부르주아의 사회, 즉 성취의식, 경쟁의식이 매우 강한 '소사장' 지향의 사회였다는 의미다.

2) 1997년 이후 신자유주의하의 강요된 자영업자화와 그 결과

1997년 이후에 형성된 50대 이상의 자영업자는 과거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1997년 이후에는 직장에서 해고되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영업자가 된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이 경우는 선택보다는 강제의 측면이 커졌다. 육체노동자나 화이트칼라 출신들

이 자영업자로 유입되는 경향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의 경우 그 비율이 매우 높다.

고임 **조제업** 노동자의 경우 자영업자로 창업하여 성공의 길을 걷기를 희망하고,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대열에 동참을 한다.²⁸⁾ 이들은 사회에서 자신이 충분히 대접받지 못한 것은 능력의 부족, 구체적으로는 일류대학을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일류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도시 중산층의 소비문화도 그대로 답습한다.

그런데 현재 자영업자가 된 사람들의 이력을 보면 현재 한국의 자영업자들의 60%는 과거에 임금노동자인 적이 있었다.(박종서 외 2012) 이 경우 자영업자가 된 배경은 그의 가치관이나 지향보다는 기업 상용직에서 탈락된 것이 더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자영업자 선택 동기를 보면 미국의 경우 자율성 추구라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자영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의 경우 자율성 추구가 자영업 선택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국의 대다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원래 개인주의적이고 자율성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달리 대안이 없어서 선택한 것임을 말해준다.(최문경 외 2005)

그러나 자영업자가 되는 과정이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간에, 그

28) 이런 능력주의 경향은 특히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규직 노동자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 『한겨레』 2012. 2. 20) 구미의 한 장비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김현수(가명, 21세, 남) 씨는 장비 제조 기술을 익혀 이 분야에서 장인(명장)에 오르는 게 꿈이다. 장인이 되면 남들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고 대우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진 자들은 결국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격이 다른 수준으로 사는 것이죠. 저도 가진 자가 된다면 똑같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합당한 능력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들이 자영업자가 되는 과정이나 그 이후의 활동을 통해 갖게 된 이들의 의식과 행동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자영업자를 꿈꾸어 그렇게 된 경우는 프티부르주아 의식, 즉 개인주의 성향이 더 강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영리활동을 하는 근본적인 조건과 이웃 업자들과의 경쟁 등 일상의 활동, 성공과 실패의 경험 등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을 몰락으로 몰아넣은 재벌 대기업, 건물 소유자,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대해 집단적으로 저항하기보다는 자신에게 권리주장을 하는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피고용자, 특히 노조의 활동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이병훈 외 2011, 260) 이것은 그들의 보수적 정치문화의 지배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거시정치적 차원에서의 자본과 노동의 매우 불균등한 역관관계가 그들의 의식과 행동, 선택입지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²⁹⁾

1990년대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정치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세력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반면, 반대로 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가 강화된 이후에도 한국의 재벌 대기업 등 자본가 계급은 여전히 정치와 사회를 헤게모니적으로 선도해나가지 못한다. 조직 노동 측의 대안이나 진보정당의 정책은 사회적으로 거의 주변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정치사회적 여론형성에서 프티부르주아 지향의 지식인 집단,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고, 중간층의 생각과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미디어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³⁰⁾

29) 이것은 프롤레타리아의 리더십이 상실될 경우 프티부르주아는 부르주아의 편에서 반동적인 체제의 등장에 침묵하게 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과 통하는 점이다.(마르크스 1987, 125-138)

30) 구해근은 중간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양대 계급의 이데올로기적 발전에 영향을 준

1997년 이전까지도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의사결정과 조직노동의 힘과 대표성이 거의 없는 한국의 분단/냉전 자본주의하에서 모든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주체는 국가/자본의 합작에 의한 산업화의 주변적·부수적 세력으로 파편화되어 있었다. 즉 과거에는 국가가 모든 경제주체들이 ‘가족 개인’으로 적응할 것을 강요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시장의 힘이 아무런 여과 없이 작동하면서 모든 경제주체는 ‘시장화된 개인’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받았다.(신경아 2013) 그래서 ‘가족 개인’은 이제 ‘시장화된 개인’으로 적응하기를 요구받고 있다.

그래서 자본/노동관계에서 시장논리, 경쟁주의 이데올로기가 압도하게 되면서 한국의 노동자들 다수도 자영업자들처럼 더욱더 ‘개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받았다. 중산층화된 대기업 정규직 육체노동자들은 더욱더 그런 경향이 있다. 물론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들이 대거 형성되었다가 파산하면서 이러한 의식에서 다소의 굴절이 나타났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시장화된 개인주의’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임노동자에서 자영업자로 변신한 사람들이 과거나 현재나 하나의 직업집단이나 계급으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1987년 대투쟁 이후 한국에서 크게 성장한 조직노동자 역시 ‘회사 직원’ 이상의 계급으로서 존재감이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동전의 다른 면을 이룬다. 계급 정체성은 관계 혹은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법인데, 몰락하는 하층자영업자와 임노동자들 간에는 연대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으며 끊임없

다고 지적하였다.(구해근 1991, 148) 앞서 지적한 것처럼 후발산업화 국가에서 도시 중간층과 노동계급의 형성이 역전될 경우 중간계급의 지배력은 더 클 것이다.

이 유동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바로 한국사회 전체의 계급, 계층 현상을 표현해준다. 즉 임금노동자들의 노동자계급 정체성 부재는 바로 프티부르주아 정치문화의 영향력,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직업집단이나 기술 소유자로서 자부심이나 ‘개인주의’ 가치관 역시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압도하는 데서 초래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아래에는 한국의 정치사회에서 국가에 의해 시민사회의 수평적 연대가 반공주의의 ‘상징 폭력(symbolic violence)’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제되고 있는 조건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1997년 이후 강요된 자영업자의 길을 걷는 수백만의 영세자영업자들이 연대를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 정치의식에서도 자영업자나 임노동자들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도³¹⁾ 분단/준전쟁체제의 정치사회 질서가 한국의 경제적 이익의 균열을 정치적으로 균열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며, 사회 전반적으로 프티부르주아 의식이 지배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적인 비즈니스 논리가 더 압도하면서 그러한 경향이 더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원래 자영업자의 생활세계는 원자화와 무계급성이다. 그것이 한국의 정치사회적 조건과 맞물려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의 소유자 의식은 근대 서구의 ‘개인주의’와 정말 다른 것일까? 고학력 전문직의 경우는 분명히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자영업자가 된 경우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가 된 예가 많기 때문에, 즉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가치지향, 직업의

31) 최태룡(1991)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식은 약하고, 따라서 이들이 서구 근대의 개인주의 태도를 견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문직 화이트칼라 자영업자들 역시 가족의 대표자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서구 사회과학에서는 계층·계급의 단위를 개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가족'단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이 점에서 가족 노동력에 주로 의존하는 이 자영업자들은 '가족 개인'으로 존재한다. 결국 국가주의 전통, 가족중심주의를 고려하지 않고서 한국의 계급·계층질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5. 맺음말

자본가/노동자의 이분법 계급도식은 물론, 중간계급(구 중간계급과 신중간계급)을 포함한 삼분법적인 계급 도식도 한국사회에는 제대로 적용될 수 없다. 한국에서 정치·경제 모든 면에서 자본가 계급은 집합적 행위자로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나, 그 나머지 모든 세력은 응집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오히려 임노동자층도 프티부르주아의 의식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하층자영업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유사한 처지에 있으며 채무자, 임차인이거나, 불안전 취업, 불안정한 수입과 불확실한 미래로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이들 하층자영업자를 마르크스의 계급도식에 입각해서 구 중간계급, 중간층 혹은 프티부르주아로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³²⁾ 약간의 생산수단만 갖고서 가족노동력이나 한두 명의 아르바이트생, 비정규

32) 윤도현은 단절선으로 보면 한국에는 세 개의 계급이 존재한다고 본다. 자본가, 고임노동자와 상층자영업자, 그리고 이들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이 바로 그 세 단이라는 것이다.(윤도현 2014, 92)

노동자를 고용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소소유자, 즉 '소사장'의 측면을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이들 대다수는 정규직 임노동자보다 하층에 속한다.

이들은 자본주의의 산업화, 자본의 집중과 집적 과정에서 탈락한 잔여 존재가 아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봉건제의 전통을 가진 유럽과 달리 산업화 이전부터 중앙집권적인 권력의 수직적인 지배하에서 보다 광범위한 영세농이 존재했던 긴 역사가 있고, 농지개혁 이후에는 온 사회가 영세농으로 재편된 적도 있을뿐더러, 관직을 향한 이동의 열망이 '가족 개인'의 출세와 상승의 열망을 부추겼기 때문에, 온 사회는 소소유자 의식이 압도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나 현재나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단결하기보다는 전통적 가족주의와 연고주의, 권력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려 한다. 그러나 중상층자영업자들이 이미 권력과의 연계를 독점하고 있고, 그들이 지역정치에서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이들 영세자영업자는 조직노동자들보다 사회적으로 더 배제된 존재가 되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은 건물주의 횡포에 신음하는 현대적 형태의 소작인처럼 되었지만, 소소유자 의식 때문에 주로 보수적인 정치가나 정당에 표를 던지고 있다.

한국의 계급 간의 갈등, 특히 노동과 자본의 잠재적 갈등은 '가족 개인'의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열망으로 전이, 흡수되었다. 미국에서 계급 간의 갈등은 사업의 영역, 즉 자영업자들의 지위상승, 개인주의로 흡수되었다. 그래서 자수성가 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좀바르트, 립셋(Lipset) 등이 말한 것처럼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영향력을 상실했다.(Lipset 1996) 노동자 정당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도 미국, 일본과 유사하다.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나 구체적인 조건은 다

르지만 결과는 비슷하다. 즉 사회 전반적으로 성공, 사회이동, 성취, 개인적 선택과 노력을 매우 중시하고 그것은 어느 정도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다. 단 미국에서는 개인적 성취, 한국에서는 가족 성취로 차별화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 등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그것이 소유자 의식, 개인주의, 자영업자 멘탈리티 등 문화적으로 뿌리내렸다. 한국에서 상승의 자격조건인 학력은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측면이 크다. 국가가 '가족 개인'의 성취를 유도하고, 개인적 선택을 거부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하였다. 그래서 한국의 소소유자 의식은 자본주의 질서는 물론 국가에 대해서도 순응적이다. 개인보다는 가족을 중시하고, 국가와 가족이 충돌하면 가족을 앞세운다.

21세기 현재 시점에서 하층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도시빈민, 청년 실업자는 서로 순환 이동하는 거의 동일한 사회적 범주가 되었다. 이들은 안정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스스로 자기개발, 창업과 성공의 주체가 돼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개인주의 없는 개인', 가족·친족 질서에서는 떨어져 나왔지만, 개인으로 서지 못하는 주변적 존재, 이들이 한국인들의 다수를 점해가고 있다. 이들의 존재와 의식, 소소유자의 역사성과 현재성에 대한 이해는 한국사회의 오늘과 미래, 그리고 한국사회학, 계층계급론의 이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탈서구중심주의 사회학 수립을 위한 핵심 연구과제다.

소사장, 즉 영세자영업자는 거주지와 사업의 공간이 일치하기 때문에 한국의 지역정치, 나아가 정치일반은 모두 한국의 소소유자 집단의 존재 및 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한국정치의 혁신, 한국 시민사회의 재구축 전망은 모두가 이들 영세자영업자가 어떻게 지역사회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직접 연

관되어 있다.

2000년 이후 대기업 대형마트(SSM)의 골목시장 침투와 영세자영업자의 몰락이 가속화되면서, '을'들의 저항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영세자영업자들의 조직화 작업과 저항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작업과 더불어 지역의 소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활동도 모색되고 있다.³³⁾ 자영업자들이 지역경제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때, 한국사회는 큰 변화를 이룰 것이다.

33) 전국 을살리기 운동본부,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이 그것이다.

■ 참고문헌

- 구해근. 1991. “한국 중간계급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문제점.”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서울: 다산출판사.
- 공보처. “시민의식 국제비교조사”. 2002.
- 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2014년 국민통합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 김재호 외. 2006.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대호. 2008. “자영업자의 비율과 그 의미를 모르고 정치를 논하지 말라.” 사회디자인연구소. 9월. <http://www.socialdesign.kr/news/articleView.html?idxno=5775>.
- 김동춘. 1995. 『한국사회 노동자연구』. 고양: 역사비평사.
- 김동춘. 2000. “한국의 근대성과 과잉교육열.” 『근대의 그늘』. 당대.
- 김병조. 1986. “현대 한국의 구중간계급의 형성과 재생산.” 『사회와 역사』 3, 259-306.
- 김영모. 1997. “한국 자영업인의 사회계층적 성격.” 한국복지연구소. 『사회정책 연구』.
- 드레이퍼, 할 저·정근식 역. 1986. 『계급과 혁명』. 사계절.
- 라이히, 빌헬름 저·황선길 역. 2006. 『파시즘의 대중심리』. 그린비.
- 마르크스, 칼 저·허교진 역. 1987.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칼 마르크스 프랑스 혁명사 3부작』. 소나무.
- 미야지마 히로시. 2013. 『나의 한국사 공부—한국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 너머북스.
- 미야지마 히로시, 배항섭, 조형근, 후지이 다케시. 2011. “‘유교적 근대’를 통해 본 한국사.”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 26, 293-339.
- 민주정책연구원. 2014. “정당지도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에 대한 분석 및 대안”(www.idp.or.kr)(2월 20일).
- 박병호. 1985.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종서, 김지연. 2012. “자영업자의 직업경로와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제194호.
- 비트포겔, 칼 저·구종서 역. 1993. 『동양적 전제주의—총체적 권력의 비교연구』. 법문사.
- 서강대사회과학연구소. 2010. 『자영업자 정치인식 조사결과표』.
- 서강대학교현대정치연구소. 2011. 『자영업자 정치인식 조사』.
- 신경아. 2013. “‘시장화된 개인화’와 복지요구.” 『경제와 사회』 통권 제98호.
- 신광영. 2004.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서울: 을유문화사.
- 신광영, 조돈문. 1994. “노동계급의 계급형성과 친족관계.”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계급과 한국사회』. 한울아카데미.
- 연합뉴스. 2015. 8. 11.
- 유경은. 2001. “구중간계급의 사회이동과 계급적 성격.”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팔무 외. 2005.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소화.
- 윤도현. 2014. “한국의 복지국가와 중간계급—자영업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스칸디나비아연구』 제15호.
- 이병훈, 신재열. 2011. “자영업자의 계층의식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92호.
- 이성균. 2006. “한국 자영업자의 사회적 자본과 소득수준.”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40집 5호.
- 이승렬, 최강식. 2007. “자영업 부문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노동정책연구』 제7권 4호, 59-85.
- 이원진. 개인화(individualization)인가 계층화(stratification)인가? 생애사건과 사회계층이 빈곤진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45(2), 25-60
- 이재훈, 박현정. 2012. “‘너희학교 학생들은 뽑지 않아’ 말문 막혀도 ... 분노보다 실력쌓기.” 『한겨레』(2월 20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9991.html.

장상수. 2003. “세대 내 계급이동.”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37집 2호.

전병유, 신진욱. 2014. “저소득층일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하는가?: 한국사회에서 계층별 정당지지와 정책태도.”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동향과 전망』 통권 제91호.

전용일 외. 2012. 『생계형 자영업 실태 및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연구』 고용노동부.

정상호. 2001. “한국사회의 지역권력과 자영업 집단의 이익정치.” 대구대학교사회조사연구소. 『사회연구』 제2권 1호.

정상희. 2014. “정당지지도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정책에 대한 분석 및 대안.” 민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핑』 제32호.

주중환. 2008.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한국경제 근대화와 소농.” 『뉴라이트의 실제, 그리고 한나라당』 일빛.

최문경, 이명진. 2005. “자영업 선택인가? 미국과 한국.”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39집 1호.

최태룡. 1991. “구중간층의 자기정체화.”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계층—이론과 실제』. 서울: 다산출판사.

홍두승, 구해근. 1993. 『사회계층·계급론』. 서울: 다산출판사.

홍영림, 성호철. 2015. “음식점 종로, 노래방 마포, 헬스장은 관악서 잘됐다.” 『조선일보』 (10월 26일).

헨더슨, 그레고리 저·이종삼, 박행웅 역. 2013.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한울아카데미.

Amo, J. Mayer. 1975. “The Lower Middle Class as Historical Problem,” *The Journal of Modern History*. Vol. 47, No. 3(Sep.), 409-436.

Bechhofer, Frank and Brian and Elliott. 1985. “The Petite Bourgeoisie in Late Capitalism,”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181-207.

Bohenhold, Dieter and Udo Staber. 1991. “The Decline and Rise of Self-Employment.” *Work, Employment and Society*. Vol. 5, No. 2(Jun.).

Form, William. 1982. “Self-Employed Manual Workers: Petty Bourgeois or Working Class.” *Social Forces*. Vol. 60, No. 4(Jun.), 1050-1069.

Koo, Hagun. 1976. “Small Entrepreneurship in a Developing Society: Patterns of Labor Absorption and Social Mobility.” *Social Forces*. Vol. 54. Issue. 4, 775-787

Kunio Odaka. 1966. “Middle Class in Japan,” *Class Status and Power*. Bendix and Lipset eds.

Lipset, Seymour Martin. 1996. *American Exceptionalism*. New York: Norton.

Poulantzas, Nicos. 1974. *Classes in Contemporary Capitalism*. London: NLB.

Steinmetz, George and E. O. Wright. 1989. “The Fall and Rise of Petit Bourgeois: the Changing Patterns of Self-Employment of the Post-War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No. 4(Mar.), 973-1018.

Ulrich, and Elisabeth Beck-Gernsheim.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Sage Publications: London, Thousand Oaks, New Dehli “individualization.”

Yee, Jaeyeol. 1993. “THE FORMATION AND REPRODUCTION OF SELF-EMPLOYMENT IN A DEVELOPING ECONOMY: AN ANALYSIS OF JOB-SHIFT RATES IN THE SOUTH KOREAN URBAN LABOR MARKET.”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22, 1(July), 1-21.

三浦展. 2005. 『下流社會—新たな階層集團の出現』. 光文社新書.